

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7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¹⁾은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들의 친 자녀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1주일에 약 3~4일,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약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두어 피해자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두어 이물질 섭취 또는 낙상의 위험, 정서

1) 시체은닉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4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적 불안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해자가 2019. 12. 27.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묶은 변을 보는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않다가 2020. 1. 4.경 외출 후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아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고 2020. 1. 6.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전부 유죄(징역 5년 + 징역 6월 + 징역 2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원심 : 일부 직권파기, 일부 항소기각(징역 6년 + 징역 6월 + 징역 2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피고인에게 후단경합전과가 있어 3개의 형이 선고됨

●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 4.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18시간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2020. 1. 6. 아침 무렵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은닉하게 하여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시체은닉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